

# 민주, 내년 총선 공천제도 마련 TF 구성

단장에 이개호 의원 등 11명 구성 9명 비명계... 공천률 논란 차단 당내 의견 수렴·최고위서 의결 이개호 "경쟁력 갖춘 후보 선출"



이개호 의원

단장에 정태호 민주연 구원장이 선임됐으며, 맹성규, 문진석, 송옥 주, 조승래, 고영인, 김 영배, 이해식, 이소영 의원과 배재정 부산사 상구지역위원장 등 원

내외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공천 TF에는 비이재명(비명)계가 대거 배치됐다. 총 11명 중 당직자를 뺀 9명 전원이 비명계로 채워졌다. 비명계의 전면 배치는 공천 불공정을 불식시키고 당내 화합을 이끌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

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대선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위원들이 상당수 포진했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결에서 도왔다.

부단장인 정태호 의원도 이 전 대표를 도왔고, 위원으로 선임된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정무실장 출신이고, 배재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세균계 위원들도 배치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대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아 전면에 나섰다. 송옥주의원도 정 전 총리 캠프에서 활약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일색의 지도부를 우려하며 최고위원 레이스를 펼쳤고, 이소영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문진석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각각 전략기획위원장과 조직사 무부총장을 맡은 당직자기 때문에, 당직자를 제외하면 위원 전원이 비명계로 채워진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공천 TF에 비명계를 대거

배치해 당내에서 나오는 '공천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민주당 공천 TF는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10일 이전까지 공천 제도와 관련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한다.

이개호 단장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천 원칙은 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며 "당이 확립해 놓은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정의 '쌍특검' 이전

수사 범위 등 입장차 본회의 전 합의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사 추천권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3월 임시회 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정의당 입장을 반영해 수사 범위를 좁힌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학·경력 위조 조항까지 포함시킨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이번에 새로 발의된 특검법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주가조작, 뇌물수수 의혹 규명만을 담았다.

발의 직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장 수석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결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양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는 뇌물 의혹은 빠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들어있다. 대신,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인사 추천권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자당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난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내 쌍특검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당은 본회의의 전까지 합의점을 찾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로 접점을 찾아보자. 수석끼리도 만나서 더 논의를 이어가자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재명 대표 부모 묘 훼손... "봉분 밟고 돌덩이 올려놓아"

李 "무슨 의미인가" SNS에 공개



(생명○, 마지막 한자는 불분명·사진)이란 세 음절의 한자가 적혀 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의 부모님 묘 사방을 파헤쳐 이상한 글이 써진 돌덩이를 누군가 문었다"며 "봉분 위를 밟고 밟고,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끔찍하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의 부모 묘소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을 알리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질문입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봉분이 낮아질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봉분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똥 것처럼)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묘소에서 발견된 돌 사진도 첨부했다. 이 돌에는 '生命○'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광주시당 '야당탄압 검사독재' 규탄대회. 정정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과 신성훈 전남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지난 1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야당탄압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여야, 이재명 전 비서실장 죽음 놓고 공방

여 "책임 떠넘겨 희생 강요" 야 "檢 강압수사... 사법살인" 민주 비명계도 참담함 호소

여야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한 탓"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사법살인"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측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비껴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하다"면서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해놓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까지 후벼파며 조문할 때는 언제고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남 탓'만 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인가"라며 "이 대표는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정치' 아니겠나"고 날을 세웠다.

여당 인사들도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재

명, 당신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다. 같은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황정민 안남시장의 '아수라' 영화를 보는 느낌"이라며 "그 영화의 황정민은 악역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꼬았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은 얼마나 더 죽어야 포악한 사법 살인을 멈출 것인가"라고 "윤석열 검찰"을 정조준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의 이 대표 제거를 위한 무도한 강압수사에 벌써 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다.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 대표와 연관성을 찾겠다고 경기도청에 상주하며 2주 넘게 압수수색을 벌이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누가 봐도 무도한 수사행태"라며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몇 명이 더 죽어야 수사가 끝나나'며 검찰의 과잉 수사에 따른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라면 망나니 칼춤과 무엇이 다르겠나"라며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을 멈추고, 피 묻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

명 때문인가"라며 "아무리 비정당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인가.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나"라며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친명계도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수사의 이름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참담함을 호소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이 대표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지난 9일 오후 6시40분께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가 남긴 노트 6장 분량의 유서에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